

점심생운 Final-Z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빠른 정답

01 ⑤ 02 ③ 03 ① 04 ④ 05 ④
06 ③ 07 ② 08 ① 09 ③ 10 ④

<해설>

1. 해외 원조론

[정답] ⑤

[제시문 파해치기]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며,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원조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기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것은 인권의 부정의한 실태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외 원조가 기근과 같은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ㄴ.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는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사회’를 ‘무법 국가’로 본다. 무법 국가는 해외 원조의 대상은 아니지만, 체제의 부정의를 교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조 주체’인 ‘질서 정연한 만민’은 무법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무법 정체들조차도 이런 종류의 비판(인권 문제)에 전혀 무관심할 수 없다. 특별히 비판의 근거가 단지 자유주의적이거나 서구적인 개념으로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합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만민법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질서 정연한 만민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무법 정체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롤스, 『만민법』]

ㄷ.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는 ‘고통 받는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에게 ‘만민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회’는 ‘무법 국가’이다.

첫째는 불순응의 조건들로, 합당한 만민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특정한 정체의 조건들을 다룬다. 이러한 정체들은 자기 체제의 합리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체들을 나는 무법국가라고 부른다.

[롤스, 『만민법』]

[Comment]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통 받는 사회’도 만민법에 ‘순응(compliance)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민법에 순응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회는 무법 국가뿐이며, 불리한 여건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만민법을 순응하지 않는 사회는 고통 받는 사회이다.

ㄹ. 롤스와 싱어의 공통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에 따르면 해외 원조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빈곤의 여부’가 아니라, ‘정치적 문화 등의 결여 여부’이다. 따라서 특정 사회가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해외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성취된 후에는 비록 여전히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는 원조할 필요가 없다.

[롤스, 『만민법』]

(해당 선지에서 싱어의 입장은 다방면에서 접근하여 적절하지 않음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고자 출제되기에 유력한 개념들을 간략하게 해설한다.)

싱어는 ①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빈곤에 처한 경우, ② 원조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외 원조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싱어(0) :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2022학년도 9평]

우리가 최선의 정보를 이용해서 생각할 때, 결국에 가서 극단적인 빈곤을 감소시킬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증가시킬 수도 있는 전망을 갖는 희생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가 우리의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를 원조할 책무는 없다.

[싱어, 『실천 윤리학』]

[오답 피하기]

ㄱ.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에게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의 예방과 해결 모두에 있다.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의 1퍼센트를 기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믿음을 사회 전반으로 널리 확산해야 한다.

[싱어, 『더 나은 세상』]

내가 아이를 구해야만 한다는 판단을 지지하는 그럴듯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싱어, 『실천 윤리학』]

싱어는 지구의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에 한정해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원조가 모두가 동등해질 때까지 계속되거나 지나친 희생이라는 비판은 싱어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다.

[김일수, 「피터 싱어의 해외 원조 의무에 관한 연구」]

2. 형벌론

[정답] ③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루소, 을은 베카리아, 병은 칸트이다. 루소는 응보적 정의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타인과 같이 동등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정상 루소에게 개인의 생명권은 국가에 양보되어 조건부적으로 보호된다.) 베카리아는 형벌을 본보기로 삼아 수형자가 아닌 구

경꾼들에게 법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칸트는 응보적 정의에 따라 살인자에게는 똑같이 사형을 부과해야 하며,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에 정의에 부합하는 형벌은 없다고 본다.

[정답 찾기]

③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응분의 보복, 즉 형벌을 의욕하는 것은 예지적 인격체인 입법자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칸트에 따르면 일반 시민과 범죄자는 형벌을 의욕할 수 없으며, 범죄를 의욕하는 자이다(칸트의 형벌론에서 다루는 ‘의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점심생윤 무료 주간지 3월 3주차 해설편 3p를 참고하자).

[오답 피하기]

① 루소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루소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사회법(혹은 사회적 권리)을 위배한 중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형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은 중죄를 저지름으로써 조국의 반역자, 배신자가 된다. 조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심지어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 혹은 공공의 적으로서 죽음을 통해 제거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적은 가상인격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고, 이 경우 패자를 죽이는 것은 전쟁법상 정당하기 때문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② 베카리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형벌이 유용한가, 2) 형벌이 사회에 필요한가. 다시 말해, 범죄가 아무리 유용하다고 해도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형벌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게 베카리아의 견해이다.

그들은 형벌을 통해 유용한 결과를 낳을지라도 그러한 형벌이 반드시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형벌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형벌은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④ 베카리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범죄의 유일한 척도를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보고, 범죄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을 정하는 것은 형법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베카리아(X) :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2020학년도 수능]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범죄의 진정한 척도가 범죄자의 의사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⑤ 베카리아가 아닌 칸트만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베카리아와 칸트 모두 범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해 보복(탈리오 법칙, talio)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 칸트는 동해 보복법에 따라 범죄와 형벌의 비례를 주장하고, 베카리아는 법률과의 상관 관계에 의거하여 범죄와 형벌의 비례를 주장한다.

칸트 → 베카리아 비판(O) :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同害) 보복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2021학년도 수능]

3. 직업관

[정답] ①

[제시문 파헤치기]

제시문 속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사회적 지위를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로 세 분류로 나누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 플라톤은 방위자와 통치자를 포괄하여 일컫는 ‘수호자’ 중에서도 철학에 뛰어나며, 이데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는 ‘철인정치’를 주장한다.

[정답 찾기]

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의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국가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의 세 가지 덕이 조화를 이루어 정의로운 사람이 되듯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각 계층에 속한 사람이 각자의 탁월성을 잘 수행하고 조화를 이뤄야지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

다고 본다.

국가는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세 계급은 인간 영혼의 세 부분에 대응되며 영혼의 각 부분과 국가의 각 계급에는 적합한 덕목이 있다.

[플라톤, 『국가』]

우리들 각자의 경우에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자기 일을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 한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도 성향이 다른 세 계급의 사람들 모두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이며,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이다.

[플라톤, 『국가』]

[오답 피하기]

②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그것을 정의로운 국가의 충분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후에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올바른 사회적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세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의 탁월성을 갖추어야지 정의로운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 :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024학년도 9평]

③ 플라톤은 사회적 역할을 분담의 기준을 각자의 취향으로 보지 않는다. 플라톤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계층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며 기질에 따라 정해진 사회적 역할을 마음대로 교환하는 것 또한 부정한다.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2024학년도 9평]

④ 플라톤의 입장에서 사유 재산을 지니는 것이 가능한 계급도 존재하지만 모든 계급이 재산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치자가 자신과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함을 중요시하며, 즉 자신의 직분에 집중하기 위해 사유 재산을 금해야 한다고 본다.

수호자 동지들이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은 집, 토지, 기타 재산을 갖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들의 급여는 그들의 식량이 되고, 그들은 이것을 다른 국민에게서 받는다. 이리하여 사적 비용이 필요없다. 내 것과 네 것을 가리지 않으므로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는다.

[플라톤, 『국가』]

⑤ 플라톤에 따르면 직업은 타고난 기질, 성향에 따른 것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것이다.

플라톤(X) :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이 가능하다.

[2025학년도 9평]

만약 성향상 장인이거나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전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 해서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거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국가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네.

[플라톤, 『국가』]

4. 토론 핵심 쟁점

[정답] ④

[Comment]

사실 해당 문항과 같은 아이디어가 수능에 출제된다면 오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알아야 할까?’라는 반문을 하기에는 선부르다. 교육과정상 ‘배아와 태아의 구분’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배아’는 임신 이후 8주까지의 존재를 일컫는다. 배아는 신체 기관과 감각 기관이 온전하지 않으며, 외관상 온전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다. 반면 ‘태아’는 임신 9주차부터 출산 이전까지의 존재를 일컫는다. 태아는 배아와 달리 신체 기관과 감각 기관이 온전하며, 외형이 뚜렷하고 선명해진다. 최근 미국에서 태아와 배아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사회의 수면 위로 오른 만큼, 사회 시사를 반영하는 수능 생활과 윤리에서 다룰 법한 소재이다.

[정답 찾기]

④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갑은 모든 신체 기관이 형성된 태아와 달리 이전의 존재인 배아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

은 배아-인간의 과정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배아에게도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도덕적 권리를 지니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따르는가에 대한 양자의 입장은 갑과 을 각각 찬성과 반대를 이룰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갑과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5. 국가관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로크, 을은 루소, 병은 홉스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비유함과 동시에 무제한적 행위가 허용되는 방종의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로크는 사회 계약 이후 국가의 통치자에게 신탁된 권력이 그의 목적에 따라 잘 이행되지 않으면, 인민은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지닌 무제한적 권리와 이를 포함한 자연적 자유를 잃게 되고, 동시에 사회적(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지닌 모든 권리를 일반 의지의 지도 하에 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한다고 본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과 같은 이기적 본성과 더불어 무제한적 권리에 따라 전쟁 상태로 비유한다. 더불어 홉스는 개인이 이성애 따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절대적 권력을 수립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④ 루소가 홉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루소는 자연 상태를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상태로 간주했지만, 홉스의 자연 상태는 추상적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다. 루소는 역사에 대한 지식은 사료에 의존해야 하지만,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 태초의 자연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고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자신이 규정한 자연 상태가 실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홉스나 로크의 자연 상태와는 매우 다르다. 그는 자연 상태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상태로 규정한다. 그가 자연 상태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철학적 성찰이었다.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역사학에 의존해야 하나, 우리에게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은 태고의 자연에 대한 역사는 철학적 추론을 통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루소의 기본 입장이다.

[김용민, 『루소의 정치철학』]

그(루소)는 가설적 역사에 대한 이러한 추론을 통해 잃어버린 자연 상태론은 자연 속에서 찾아낸 진리라고 주장한다. 즉 자연 상태론은 철학적 추론에 근거하여 얻은 인류의 가설적 역사이지만,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강호 외, 『사회 계약론 연구』]

반면 홉스는 자신이 규정한 자연 상태인 전쟁 상태가 역사적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실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물론, 그럼에도 홉스는 태초의 자연 상태가 전쟁과 같은 곳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홉스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 과년도 EBS와 학계적 입장.)

그런 전쟁의 상태는 과거 어느 시기에도 존재한 일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전 세계에 걸쳐 그런 상태가 보편적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홉스, 『리바이어던』]

(홉스의) 자연상태론은 역사적 사실(史實)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이론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형성의 근거를 개인 자신의 “정념”에서 찾음으로써, 국가형성의 이론적 정당성을 이로부터 도출하려는 논리적 가설이었다.

[조강호 외, 『사회 계약론 연구』]

[오답 피하기]

① 로크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로크는 적극적 저항권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부를 해체시키는 것이지 정치 사회 내지는 공동체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첨언하자면, 시민의 저항은 단지 신탁을 회수하는 것이며, 사회 계약 자체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또는 통치)의 해체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명백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사회의 해체와 정부의 해체를 구분해야 한다. ... 이러한 결합(사회, 정치 사회, 공동체)이 해체되는 통상의 그리고 거의 유일한 방식은 외국의 군대가 침입하여 그들을 정복하는 경우이다.

[로크, 『통치론』]

② 루소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루소는 사회 상태에서도 개인은 ‘사회적(시민적) 자유’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물론, 루소에 따르면 (제시문에서도 알 수 있듯)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잃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무제한적인 자연적 자유가 사회 계약을 통해 제한적인 사회적 자유가 환원된다고 보는 편이 낫다.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이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와, 그를 유혹하고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다. 그가 얻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 보상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힘에 의해 한계가 정해지는 자연적 자유와 일반의지에 의해 제한되는 시민의 자유를 잘 구별해야 하고, 힘의 결과일 뿐이거나 최초 점유자의 권리일 뿐인 점유와 확실한 명의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소유권을 구별해야 한다.

[루소, 『사회 계약론』]

③ 홉스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우선 이 선지를 통해 홉스는 왕권신수설을 부정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주권자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과, ‘위대한 리바이어던(주권자/통치자)’와 같은 표현들에 의해 홉스의 이론이 ‘왕권신수설(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이론)’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홉스는 주권자의 행위에 대한 인민의 저항 역시 인정하며, 왕당파(왕권신수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단)으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애당초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국가의 권력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에는 당대의 왕권신수설에 대한 반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홉스와 로크의 정치철학은 영국에서 왕당파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이 입정왕권신수설을 비판하고, 국가의 기원과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려는 데서 발전했다.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⑤ 홉스에게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법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며, 인간이 인식 가능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 즉 이성의 명령이 존재하며,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홉스에게) 자연법들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보편적 진리이며 국가의 성립에 앞서 이미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로부터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적 준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애링턴, 『서양윤리학사』]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상태의 개인이 누구나 이성에 의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연상태를 벗어나 평화와 안전, 재산의 향유를 보장하는 사회계약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6. 분배 정의

[정답] ③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롤스가 주장한 '원초적 상황'에서 분배적 정의에 관한 소유 권리론적 개념을 산출할 수 없음을 비판하며,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에서 자연 상태와 같은 '원초적 입장'의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며, 무지의 장막을 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수적 사실을 모른 채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본다. 이를 롤스는 '공성으로서의 정의'라 일컫는다.

[정답 찾기]

ㄴ. 노직이 긍정할 질문으로 적절하다. 노직은 소유 정의 원리로써 '취득에서의 원리', '이전에서의 원리', '불의의 교정의 원리'를 제시한다. 여기서 '불의의 교

정의 원리'는 앞서 언급한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시, 노직은 이를 불의(不義)로 간주하여 이를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교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노직은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개인의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노직 : 소유 권리의 정당성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회의 분배도 정의롭다.

[2021학년도 수능]

ㄹ. 롤스가 긍정할 질문으로 적절하다. 롤스는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 2-1) 기회 균등의 원칙 > 3) 차등의 원칙'의 순서대로 축차적 서열을 이루는 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잘 실현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X) :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가?

[2028학년도 통합사회 예시 문항]

[오답 피하기]

ㄱ. 롤스와 노직이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롤스와 노직 모두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불침해의 권리'로 타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롤스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려서 옳은 선지로 고르는 학생은 '제한'과 '침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롤스의 기본적인 자유(혹은 권리)는 불침해의 권리이자 동시에 제한될 수 있기에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롤스, 노직(O) : 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 권리를 지닌다.

[2024학년도 수능]

ㄷ. 롤스가 부정할 질문이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천부적 재능의 분포 그 자체가 곧 공동 자산이라는 것은 아니다. 롤스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차등의 원칙의 의미를 보다 더 명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정의론』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 분포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든 그 혜택을 공유하겠다는 합의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정의론』은 이 분포가 공동 자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설명이 시작되는 근본 관념들에서 이용할 수 없는 (규범적) 소유의 원칙을 전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차등의 원칙은 독립적 전제인 그러한 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7. 죽음관

[정답] ②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장자이다.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불멸하는 영혼에 의해 참된 이데아를 경험할 수 있으며, 현상계에서 이데아의 존재를 아는 철학자는 죽음의 세계에서만 지혜를 향유할 수 있다고 믿고 죽음을 오히려 갈망(渴望)한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지인(至人)을 제시하는데, 이는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일컫는다.

[정답 찾기]

② 플라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즉 죽음 이후에서야 영혼이 참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플라톤은 참된 철학자에게 죽음은 회피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닌, 오히려 추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주저하고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부와 명예를 사랑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플라톤 :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를 얻는다. 죽음이 다가올 때 죽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며, 육신을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부나 명예를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

[2023학년도 수능]

[오답 피하기]

① 플라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녔다 해서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에게 사물 그 자체, 즉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플라톤은 살아 있는 동안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은 육체의 방해 때문에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없다고 보며 죽고 나서 영혼의 해방이 이뤄진 이후에서야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플라톤, 『파이돈』]

③ 장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장자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과정인 건 맞지만 그것을 기(氣)가 연결되었다가 끊어지는 과정으로는 보지 않는다. 장자에 따르면 삶은 기가 모인 것이며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으로 기의 연결과 끊김의 과정과는 다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사계절의 운행에 빗대며 생사는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임을 주장한다.

장자(X) :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2025학년도 6평]

장자 : 삶과 죽음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2022학년도 수능]

④ 장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장자는 차별 없이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본다. 장자에게 삶과 죽음은 이 세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므로 그러한 과정 중 하나인 삶과 죽음은 기뻐하거나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몰랐다. 세상에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았거니와 죽음으로 들어감을 거부하려 하지도 않았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었다. 그는 시작을 꺼리지도 않거니와 종말을 구하지도 않았다. 삶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다시 그러하였다.

[장자, 『장자』]

⑤ 플라톤만의 입장이다. 장자 역시 육체불멸(肉體不滅)설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난다'와 같은 표현이 장자의 입장으로는 어색하다.

그것(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닌가?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이러한 분리의 완성인 것이야. 영혼이 독립해 있어서 육체에서 해방되고 육체가 영혼에서 해방될 때, 이것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플라톤, 『파이돈』]

8. 국제 평화론

[정답] ①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칸트, 을은 갈통이다. 칸트는 평화 연맹(국제 연맹, 연방 체제)를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도덕적 실천적 이성(칸트)은 전쟁을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갈통은 의도적이고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비의도적, 비가시적인 폭력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폭력까지 모두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①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타국의 침략에 대응할 권리, 즉 전쟁의 권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모든 수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이라 함은, 정당한 수단 중에서 모든 수단을 일컫는다.

한 국가는 타국의 능동적 침해가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곧 전쟁의 권리를 갖는다.

[칸트, 『영원한 평화』]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아래의 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어 전쟁의 경우도 장래의 지속적인 평화의 확립에 필요한 신뢰를 파괴할 터 인 교활한 수단(간첩 파견, 암살 독살 거짓 정보의 유포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칸트, 『영원한 평화』]

[오답 피하기]

②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에서 국제 발행에 관한 조항을 제시한다.

[예비조항 4항] 국가는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칸트, 『영원한 평화』]

다만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발행이 금지되는 국제은 '대외 분쟁과 관련된' 국제이지, 해당 조항이 모든 국제 발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칸트에 따르면 인프라와 같은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타국으로부터 부채를 지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나라 경제(도로 개선, 새로운 주거 마련, 우려되는 흉년을 대비한 창고 매입 등등)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원조를 구하는, 이러한 정책은 미심쩍지 않다.

[플라톤, 『파이돈』]

③ 갈통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갈통은 군사 훈련의 효과를 인정한다. 갈통에 따르면 군사훈련은 폭력을 직접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서, 타국의 폭력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군사 훈련은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폭력 수단 및 폭력을 사용하는 정신 상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보여 주며 폭력을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경찰 폭력이 더 나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활발한 비폭력 훈련과 현지 주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그리고 갑자기 한방에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나름대로 정당화된 증오를 가지고 참석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갈등을 조정하는 테크닉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④ 갈통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종교나 예술과 같은 경험적 사실 뿐만 아니라 과학과 같은 자연적 사실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번지는 것이다.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⑤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가 주장한 '방어 전쟁'은 도덕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법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 실천적 이성이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항할 수 없는 거부권을 표명한다. 자연 상태에서의 나와 너 사이의 전쟁도, 비록 내적으로는 법칙의 상태이나 외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법칙 없는 상태에 있는 국가들인 우리 사이의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

[칸트, 『영원한 평화』 (역자 해제)]

9. 시민 불복종

[정답] ③

[제시문 파해치기]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의 충실성을 인정하는 개인들이 공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소수가 법이나 정책 등의 불의를 알리는 것을 시민 불복종으로 본다. 시민 불복종자는 자신의 행위가 합리적인 것임을 정치적 권력을 쥔 다수자들에게 숙고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일반적으로)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싱어는 인간의 영역 뿐 아니라 동식물과 같은 환경 영역에서의 시민 불복종 역시 정당화 가능하다고 본다.

[정답 찾기]

ㄴ.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곧 공적 정의관으로써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롤스, 『정의론』]

ㄷ.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법의 존중심을 감소시키는 것은 결과적 측면에서 공적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음에 다수가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민 불복종이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급격히 줄일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러한 목적들의 중요성이, 법에 대한 복종심의 일반적인 저항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다소간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싱어, 『실천윤리학』]

[오답 피하기]

ㄱ.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가장 잘 보장되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일컫는데, 롤스에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 형태이다.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이론(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는 민주 체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이론은 합법적으로 확립된 민주적인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역할과 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연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종류의 항의나 저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롤스, 『정의론』]

ㄷ.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는 1)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2)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었지만 도덕적으로 그른 경우’이다. 따라서 싱어에 따르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이나 정책 등에도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견해의 진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게 그릇된 일이어서 다수에 반대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싱어, 『실천윤리학』]

10. 환경 윤리

[정답] ③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레오폴드, 을은 칸트, 병은 테일러이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자연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 삶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도 인정하기는 하지만 윤리적, 심미적 관점에서 그들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칸트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직접적 의무)만 지니고,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의무(간접적 의무)는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가 아니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고 한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이들은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어떤 생명체도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정답 찾기]

ㄱ. (레오폴드 O, 칸트 X, 테일러 X)

레오폴드만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생명 공동체의 선을 보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이 생명 공동체의 선의 보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레오폴드는 개체의 존중을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아름다움 등의 보전에 종속시킨다. 반면 칸트는 인간 외의 생명체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의 선의 보전과 관계없이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토지 윤리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생명 공동체 전체의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종속시키고 있다.

[송명규, 『심려적인가, 의무적인가-알도 레오폴드의 토지 윤리』]

ㄴ. (레오폴드 X, 칸트 X, 테일러 O)

테일러만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테일러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은 '불간섭 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결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개별 유기체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잘 대하는 상관없이 그들을 포획하거나 자연 서식처에서 떼어 놓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심지어 자연의 위험에서 꺼내주거나 야생에서 병든 후에 건강을 회복시켜줌으로써 그들을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간섭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생명체를 가능한 한 빨리 야생으로 되돌려놓을 의도로 그런 일을 하고, 그 의도를 충분히 이행한다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반면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통합성, 아름다움 등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학자로,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입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ㄷ. (레오폴드 O, 칸트 X, 테일러 O)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공통 입장으로 적절하다. 레오폴드와 테일러 모두 생명체의 존속할 권리를 인정하며,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오폴드(X) :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23학년도 6평]

테일러 :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자기 보존과 행복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다.

[2015학년도 6평]

[오답 피하기]

ㄹ. (레오폴드 X, 칸트 O, 테일러 X)

칸트만의 입장이다. 칸트는 의무를 갖는 주체는 하나의 인격이어야 하며,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윤리적 의무는 실존하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레오폴드는 생명체에서 나아가 무생물까지, 테일러는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인정한다.

인간의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이 주체의 의지에 대한 도덕적 강요이다. 그러므로 강요하는(의무를 지우는) 주체는 첫째로 하나의 인격이어야만 하고, 둘째로 이 인격은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 오류 및 오타 문의 :

lunchethics01@gmail.com

© 인스타그램 : @lunchethics

© 총괄 : 김 지 호 / 1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

점심생윤™은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꿉니다.

점심생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점심생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lunchethics. All rights reserved.